

경찰,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참사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5개월간 조사팀의 구성·조사대상 등을 논의하며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5개월간 조사팀의 구성·조사대상 등을 논의하며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총괄팀장 아래 3개팀으로 운영되며 전문임기제공무원 조사관 10명과 경찰조사관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각 팀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조사관과 경찰조사관들을 동일하게 배치, 조사 활동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3개팀의 각 팀장은 민간인이 맡았으며 민간조사관 2명과 경찰조사관 3명을 함께 배치해 한 팀당 6명이다.

조사팀 활동기간은 1년으로 6개월씩 2차례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훈련에는 단일 사건당 조사기간이 6개월로 명시돼 있지만 가능한한 3개월 안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내용을 계획이다.

조사팀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5개의 우선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사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백남기농민·용산참사·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뒤 이들 3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밀양·강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다.

진상조사팀은 경찰청 소속 조사기구로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 주된 조사대상은 현직 경찰관이지만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전직 경찰관이나 목격자(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를 구해 동의하에 임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공권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키포인트"라며 "방법은 수사가 아닌 조사다. 강제적인 권한이 없고 임의적인 조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이미 수사 종결 혹은 사법처리가 끝난 사안일 경우 수사기록이나 판결문을 참고만 할 뿐 조사의 '척도'로는 삼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력이 계획되지 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말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권력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불법 파업이나 농성을 했더라도 국가 공

한 팀당 6명씩 총 3개팀 20명 진상조사팀 구성 백남기·용산참사·쌍용차 사건 최우선 조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원칙을 적법하게 준수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 쟁점이다. 예를 들면 쌍용차 사건의 경우 노동자를 파업이 적법한 파업이나 불법 파업이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파업 노동자를 해산할 때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경찰법이나 직무집행,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해 적정했는지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용산 사건의 최대 쟁점은 불을 누가 냈느냐인데 법원에서는 옥상에 올라간 사람(시위대)들의 실화로 판단했지만 법원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진압과

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이 조사대상이다. 특히 경찰도 희생됐기 때문에 인권, 안전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팀의 우선 조사대상 사건 외에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정 사건이 접수될 경우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소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찰관 개인의 직무상 위법 행위나 비위, 공권력 남용 등은 경

찰청 감사관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한을 존중해 기존 기관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만약 진상조사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내부 징계 혹은 형사처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진상조사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징계나 이런 건 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인권침해가 사실이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관련자 교육이나 제도개선 등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이동 한복 미리 준비하세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둔 6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1지구 2층 한복점에서 시민들이 이동 한복을 살펴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빛내서' 밀린 임금 한 달분 지급...합의안은 안갯속

금호타이어가 미지급된 두 달분 임금 가운데 한 달분 임금을 빛을 내어 최근 우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지난 달 임금을 포함해 두 달분 임금 총 480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밀린 임금 가운데 지난해 12월분 임금 180여억원을 지난 2일 당좌대월(마이너스 통장 성격)을 통해 지급을 마친, 국내공장 직원 5000여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올 1월분 임금은 유동성 여력이 없어 구체적인 지급 일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도 빚까지 내어 가면서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노사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화해의 손짓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사측이 노조와 대화 재개를 위한 화해 국면을 만들었지만 경영 정상화 기를 마련을 위한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조건부로 1년 연장하면서 이달 말까지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자구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보름여 남은 기간 동안 노사 간 대화 단절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기업개신좌담(워크아웃) 또는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30% 삭감, 191명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한 치의 양보 없는 태지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설 전까지는 노사 간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절박한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설 전까지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한 자구계획안 합의안이 도출돼야 설 이후에 채권단과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차입금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시리아 반군지역서 러시아군 추정 병원 공습

러시아군이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서부 이德利브에서 병원을 공습한 것으로 추정돼 구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德利브 카르타벤서 병원을 운영 중인 영국 비영리단체 '핸드 인 핸드 포 시리아'(HHS)는 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 공습으로 병원이 파괴됐다고 미들이스트아이(MEE)에 주장했다.

공습을 받은 병원은 심장 호흡기 질환 치료 장비와 중환자실, 암센터를 갖추고 있었지만 공습으로 모두 망가졌다.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서 공습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환자들을 모두 대피시킨 덕분에 사상자는 없었다.

HHS 측은 성명을 통해 "주민 백만 명이 사용하는 병원 문을 닫아야 해 절망스럽다"며 "병원은 최근 지상전과 공습 심화로 인한 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德利브에서 또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시리아 아메리칸 메디컬 소사이어티'(SAMS) 역시 마라트 알 누비에 위치한 병원이 이날 밤사이 공격을 당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카프라벨에 주둔하는 반군 관계자 아부 바흐라는 터키 아나톨루통신에 병원 공습이 있기 전 시리아 크메이마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2대가 이륙했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반정부 단체 '시리아연합'(SC)은 이德利브 병원 공습 사태에 관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점령군과 아사드 정부군이 야만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규탄했다.

이德利브 병원 공습은 반군이 이德利브에서 4일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해 조종사를 살해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러시아는 이 사건 이후 이德利브 공습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

미 법원, 15세 소녀 납치살해범에 30년형 선고

뉴저지주의 한 빈집에서 유해로 발견된 10대 소녀에 대해 살해사실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한 용의자에게 5일(현지시간) 법원에서 30년 형이 최종 선고 되었다.

찰스 모슬리는 지난 해 12월 15세의 중학생 니콜 앙스타트를 살해한 가장 살인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로우 타운십의 빈 집에서 소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다. 아이의 시신은 부모가 2015년 12월 실종신고를 한 지 몇 주일 지나서 이 빈집에서 발견되었다.

모슬리의 자백으로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던 데릭 파워스는 석방되었다.

日 자위대 헬기, 주택가 추락 1명 사망

본 자위대 헬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자위대원 1명이 숨지고 여자 어린이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NHK방송 등은 5일 오후 9시 1분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현 간자키(神埼)에서 자위대 'AH64' 전투 헬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자위대원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NHK방송은 헬기가 추락한 단독주택은 전소됐다고 전했다. 이 주택에는 4인 가족이 사는 집으로 사고 당시 혼자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채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기가 타고 있던 자위대원 3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 기장인 사이토 겐이치 소령(43)은 행방불명 상태로 방위성이 수색을 하고 있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사고 헬기는 사가현 육상 자위대 제 3 대전자 헬기부대 소속으로 당시 정비를 마친 후 기체 상태를 확인하기위한 비행 중 사고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또한 당분간 사고헬기와 같은 모델의 헬기는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위대 헬기의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홋카이도(北海道) 호쿠로(北碓)에서 육상자위대 정찰기가 추락해 탑승 대원 4명이 숨졌다. 이어 8월에는 아오모리(靑森)현 앞바다에서 야간훈련을 하던 해상자위대 헬기가 추락했다.

같은 달 아미구치(山国)현 이와쿠니(岩國)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해상자위대 헬기가 옆으로 넘어져 대원 4명이 부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시즈오카(静岡)현 하마마쓰(浜松)시 앞바다에서 항공자위대 대원 4명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했다.

뉴스스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건강진단률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	~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42%p 감소	18%p 감소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일 뿐임과 무관하며, 미리 미리 건강을 챙기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